

2025학년도 2학기 학력진단평가 2학년 민법 [OX형] 답안

시험일시 : 2025. 09. 05.(금) 18:00~20:40
출제교수 : 김덕중 교수

번호	정답	출처	[근거적시 요] 이유
1	X	제10회 변시. 문 1.	
2	○	22년 제2차 변모. 문 3.	
3	X	제13회 변시. 문 9.	
4	○	제14회 변시. 문 2.	
5	X	제14회 변시. 문 5.	
6	○	24년 제1차 변모. 문 35.	법정대리인인 대리행위가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대리인이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 그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누구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 없음.
7	○	제13회 변시. 문 19.	
8	X	제13회 변시. 문 19.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음. 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결국 甲은 위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전부채권자 丁에게 대항할 수 있음.
9	X	제13회 변시. 문 25.	B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행해지는 경우, 압류명령은 유효하나 전부명령까지 유효하게 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가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위채권자가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한 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어,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전부명령은 무효임. 다만, B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이에 대한 유효한 압류명령은 추심자체만 금지할 뿐, B채권 청구 자체는 가능하므로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가 존재하는 것임. 결국 채권자대위소송은 인용됨.
10	○	제12회 변시. 문 18.	
11	○	제11회 변시. 문 27.	
12	X	22년 제2차 변모. 문 31.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외측설의 태도(판례)에 의하면 을의 단독부담부분인 4,000만 원만큼 먼저 소멸하고, 다음으로 공동부담부분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소멸하므로, 丙의 부담부분은 5,000만 원임
13	○	24년 제2차 변모. 문 6.	
14	○	제11회 변시. 문 1.	
15	X	제14회 변시. 문 29.	

번호	정답	출처	[근거적시 요] 이유
16	○	제14회 변시. 문 13.	
17	X	제14회 변시. 문 2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채권압류명령 등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면,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님.
18	X	제14회 변시. 문 26.	
19	X	23년 제1차 변모. 문 26.	매도인이 약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의 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등기명의를 회복하게 된 매도인 및 매도인으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에 대해 자신의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음
20	X	23년 제3차 변모. 문 28.	
21	X	24년 제3차 변모. 문 22.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됨. 따라서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 여서 양도된 채권이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존속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후에 채권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22	○	24년 제2차 변모. 문 19.	
23	○	제14회 변시. 문 28.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본래 채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이행불능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함. 본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면 그 채권은 그 기산일에 소급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 채권자는 당초 그 권리의 이행을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이처럼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이상 본래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면, 그 채무불이행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그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24	X	23년 제1차 변모. 문 29.	
25	X	제11회 변시. 문 11.	
26	X	22년 제3차 변모. 문 3.	
27	X	23년 제1차 변모. 문 11.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이는 명의신탁자도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함.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임
28	X	제10회 변시. 문 5.	
29	○	제10회 변시. 문 14.	
30	○	제11회 변시. 문 18.	

번호	정답	출처	[근거적시 요] 이유
31	X	제13회 변시. 문 33.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u>채무자는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먼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비로소 상계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처럼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상계에 대한 기대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가 가지는 법적 지위에 우선할 수 없음. 결국 채무자 乙은 상계로써 후순위저당권자 戊에게 대항할 수 없음.</u>
32	○	제13회 변시. 문 26.	
33	X	제13회 변시. 문 29.	
34	○	24년 제3차 변모. 문 7.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u>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전용물소권)를 할 수 있다고 보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부정함.</u> 또한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u>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乙)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임. 결국 병은 갑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음</u>
35	○	제11회 변시. 문 10.	
36	○	제13회 변시. 문 28.	
37	X	제14회 변시. 문 20.	
38	X	제13회 변시. 문 20.	
39	X	제14회 변시. 문 34.	
40	X	제14회 변시. 문 35.	진정상속인이 <u>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됨.</u> 왜냐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참칭상속인에게만 인정되고 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양수한 제3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면 <u>거래관계의 조기안정을 의도하는 단기의 제척기간 제도가 무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참칭상속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상의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보면서 같은 상속재산을 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전득한 제3자는 진정상속인의 물권적 청구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이론적 모순이 생기기 때문임.</u>